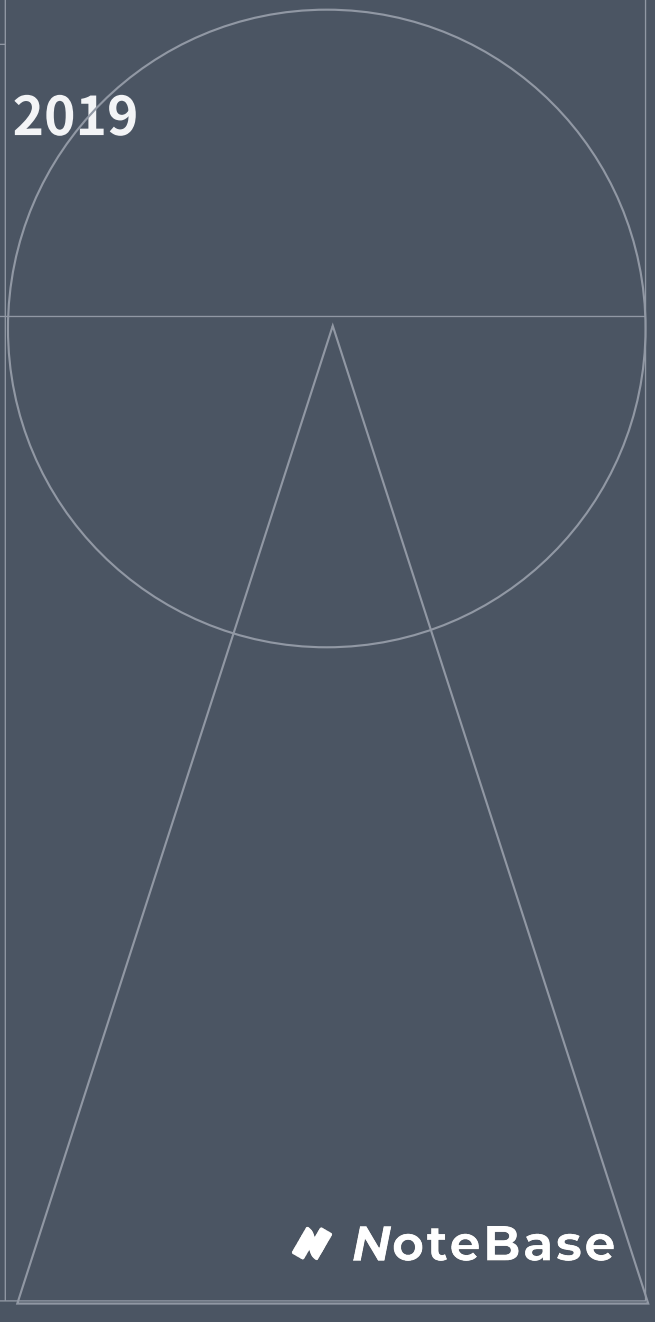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19

공무원/국가직/9급 · 사회 · 2019

문 1.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②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법률을 제정한다는 점에서는 대의제와 연결되며, 국민이 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는 국민소환제이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이 투표로 이들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③ O: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이 투표에 붙인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므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④ X: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는 국민발안제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헌법 제52조는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인정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 국가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할 경우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다.

① 선거 공영제
② 중·대선거구제
③ 보통 선거제
④ 선거구 법정주의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부담하여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선거 공영제이다.

공통 해설

선거 공영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의 일부를 관리하고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과열 경쟁을 억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문의 비용 부담, 기회 균등 보장, 과열 방지는 모두 **선거의 공적 관리와 비용 부담**이라는 공통 원리로 연결된다.

다만 국가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면 후보자가 직접 감당해야 할 비용이 줄어 출마가 쉬워지므로,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선거 공영제에서 **공적 비용 부담이 과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NoteBase

문 3.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론은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②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다.

③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④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루소의 사회계약은 **개인들이 공동체 전체를 구성하는 계약**이며,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므로 지배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홉스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권까지 양도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계약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들의 동의**에서 나온다. 홉스가 강력한 주권자를 옹호한 것도 권력의 성립 근거를 개인들의 계약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같다.

② O: 홉스는 공통의 강제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보존과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 경쟁하고 불신하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이성과 자연법에 따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분쟁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집행할 공통의 권력이 없어 **권리 보장이 불안정하다**고 설명하였다.

③ O: 홉스는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와 이기적 성향이 경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성악설적 인간관으로 분류된다. 루소는 인간이 본래 선하며 사회의 불평등과 타락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성선설적 인간관으로 분류된다. 다만 홉스의 관점을 '인간의 욕망 자체가 도덕적인 죄악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선지의 대비는 **홉스의 이기적 인간관과 루소의 본성적 선함**을 요약한 것이다.

④ X: 루소는 각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결합하여 인민이 주권자가 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개인들이며, 주권은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통해 행사된다. 따라서 **지배자와 계약하여 주권을 양도한다는 설명**은 루소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주권자인 인민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홉스는 개인들이 서로 계약하여 자신을 다스릴 권한을 주권자에게 맡기고 강력한 국가권력을 세운다고 보았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에 저항할 자기 방어권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는 표현도 **자기 방어권까지 포기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NoteBase

문 4.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는 힘을 추구하며,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 보편적 윤리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나) 국제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본다.

①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나)의 관점과 달리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③ (나)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 (나)는 (가)의 관점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경제·환경·인권 문제까지 폭넓게 중시하는 것은 (나)의 **이상주의**이다. (가)의 현실주의는 국가 간 힘의 관계와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이해한다.

선지별 해설

(가)는 국가의 힘 추구와 보편적 윤리의 제한된 역할을 강조하므로 현실주의이고, (나)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국제사회를 강조하므로 이상주의이다.

① O: 현실주의는 국가들을 통제할 강력한 세계정부가 없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이해한다. 이때 무정부 상태란 규칙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중앙 권력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힘을 중시한다.

② X: 현실주의는 군사력과 국가안보를 핵심 문제로 다루는 반면, 이상주의는 협력이 필요한 경제·환경·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따라서 경제·환경·인권 문제를 폭넓게 중시하는 관점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③ O: 이상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를 신뢰하며, 국제사회를 힘만 지배하는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 제시문의 (나)처럼 **보편적인 선과 국제규범이 작동하는 사회**로 이해한다.

④ O: 이상주의는 국가들이 이성적 판단과 규범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법으로 국가가 지켜야 할 규칙을 마련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oteBase

문 5. 다음 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여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하여 배분하며,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②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며, 선거운영 방식이 다수 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

④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갑국은 **후보자에게 던진 한 표를 그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표로도 간주**한다. 따라서 후보자와 소속 정당 중 한쪽만 지지하는 유권자는 두 의사를 따로 표현할 수 없어 선택권이 제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최고 득표자 한 명을 선출하므로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야 당선되므로, 지지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 후보보다는 **거대정당 후보에게 대체로 유리**하다. 군소정당의 지지가 여러 선거구에 분산되면 득표가 의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② X: 문제되는 것은 보통선거가 아니라 **평등선거 원칙**이다.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모두 기여하지만, 무소속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지역구 의원의 선출에만 기여한다. 이처럼 표가 대표자 선출에 기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에 이른 국민에게 재산·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선거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③ X: 지역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므로 소수대표제가 아니라 **다수대표제**이다. 다수대표제는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 사례에서는 과반수 득표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여 소수 세력도 대표자를 낼 수 있게 하는 소수대표제에 비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선거 운영이 비교적 단순하고 선거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편이다.

④ O: 갑국은 정당에 대한 별도 투표 없이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를 그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면 지지하지 않는 소속 정당에도 표를 주게 되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게 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분리하여 표현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NoteBase

문 6.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④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모든 조약'이 잘못된 표현이다. 국회는 **헌법에 열거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만 동의권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조약은 국가 간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② O: 헌법 제73조에 따라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도 체결·비준권의 주체가 국회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③ X: 국회의 동의권은 **모든 조약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조약'을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지위 보장의 기준을 국제법과 조약에 두고 있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산업 기능 요원 편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및 신상 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의 범행 주체인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

② 적정성

③ 관습 형법 금지

④ 소급효 금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대표이사를 뜻하는 '사기업체의 장'에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까지 포함하면, 법이 정한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이처럼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공통 해설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형벌 법규의 문언이 허용하는 의미를 넘어, 규정된 경우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경우까지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제시문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고용주' 중 '사기업체의 장'을 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로 해석한다. 실제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도 이 규정의 고용주에 포함하면, 규정의 의미를 벗어나 범행 주체를 확대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근거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법률을 해석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형벌의 적정성이나 관습의 적용, 법률의 소급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은 아니다.

NoteBase

문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

②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③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그 자체로는 노동조합 가입·활동 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가입·활동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동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금지한 사용자의 행위이다. 각 선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O: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한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

② O: 노동조합 대표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X: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경영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제시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자체는 노동조합 가입·활동 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O: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으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고용 조건을 금지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④ 참정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공익을 위한 제한이라도 그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내용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뜻이다.

② X: 과잉금지원칙의 네 요건은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원칙에 위반된다.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뜻이고, 수단의 적합성은 선택한 수단이 그 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침해의 최소성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며, 법익의 균형성은 제한으로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이 없으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합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③ O: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지 않도록** 한다. 헌법에 이름이 명시된 기본권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권 보장을 부정할 수 없다.

④ O: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이나 공무 수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이다. 선거권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이고, 공무담임권은 공직을 맡아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24조와 제25조는 각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한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 ~ (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 ~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갑)	(정)	예	아니요	아니요
(을)	(무)	예	예	아니요
(병)	(기)	예	예	예

①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③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④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갑과 정이 계약 갱신에 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어진다. 갑의 주민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요건이며,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표에서 갑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주어진 상태에서는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X: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그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필요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을은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보증금 2억 원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X: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병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인 병 자신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정 통지기간 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다. 갑과 정은 만료 때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 **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묵시적 갱신은 가능하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제3항).

NoteBase

문 11. 밑줄 친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A이론과 B이론이 있다. 이 중 A이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주변의 제3세계 국가들은 중심부인 선진국으로부터 자원과 재화를 착취당하는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전락하여 저발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론을 지지하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A이론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며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보기>

ㄱ. 전통은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다.

ㄴ.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ㄷ.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ㄹ.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B이론인 **근대화론**은 전통적 가치와 제도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이를 서구의 근대적 가치와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사회가 **일정한 발전 단계**를 거쳐 근대 사회로 나아간다고 본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A는 종속 이론, B는 근대화론이다. 종속 이론은 제3세계의 저발전 원인을 중심부 선진국과의 불평등한 종속 관계에서 찾는다. 반면 근대화론은 전통적 가치와 제도 등 사회 내부의 요인에 주목하고, 서구 사회를 발전의 모델로 삼는다. 제시문의 '나'는 신흥공업국의 발전을 들어 종속 이론의 설명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며 근대화론을 지지한다.

ㄱ. O: 근대화론은 전통적 가치와 제도가 합리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적 요소를 근대적 요소로 바꾸는 것**을 발전의 중요한 조건으로 본다.

ㄴ. X: 서구 사회의 우월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서구를 발전의 모델로 삼는 근대화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대화론은 **서구의 근대 사회를 더 발전된 사회로 평가**하고, 비서구 사회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ㄷ. O: 근대화론은 사회마다 발전 정도와 속도는 다르더라도,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공통된 발전 단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제3세계 국가도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ㄹ. X: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진국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종속 이론의 입장**에 해당한다. 근대화론은 선진국의 자본·기술·제도를 받아들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므로, 제시된 주장과 구별된다.

근대화론에 부합하는 보기는 ㄱ,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 B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 이론	A이론	B이론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예	아니요
내부 구성원 간 귀속 의식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① A이론은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② B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③ A이론은 B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④ B이론은 A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B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불평등을 설명하는 **계급 이론**이다. 이 이론은 경제적 지배 관계가 정치적 지배 관계를 결정하므로,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A는 지위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베버의 계층 이론이다. 지위 불일치는 경제적 지위, 사회적 명예, 정치적 권력의 높낮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다. B는 지위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의 귀속 의식을 강조하므로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다. 계급 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른 경제적 위치와 계급 구성원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중시한다.

① X: A의 계층 이론은 소득·재산, 명예, 권력 등의 정도에 따라 계층이 **연속적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을 불연속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B의 계급 이론이다.

② X: B의 계급 이론은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일원론적 관점**이다.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명예와 정치적 권력도 독자적인 불평등 요인으로 보는 다원론적 관점은 A의 계층 이론이다.

③ X: **두 이론 모두 경제적 요인의 작용을 인정**한다. A는 경제적 요인을 여러 불평등 요인 중 하나로 보고, B는 경제적 요인을 다른 영역의 불평등까지 결정하는 근본 요인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다.

④ O: B의 계급 이론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이 경제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력도 지배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설명한다. A의 계층 이론은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정치적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다음의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 행동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이며, 학습은 개인과 친밀하거나 중요한 혹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특히 기존의 일탈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은 구체적으로 일탈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 등을 학습한다.

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③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일탈의 기술과 가치관을 친밀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배운다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의 설명이다. 따라서 일탈을 부추기는 교류를 줄이고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집단과의 교류**를 늘리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제시문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일탈 행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특히 친밀한 집단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탈의 구체적 기술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와 가치관도 배운다는 점이 제시문의 핵심 단서이다.

① O: 일탈을 학습할 수 있다면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과 가치관도 교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집단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일탈에 우호적인 태도의 학습을 줄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이다.

② X: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이 관점은 지배 집단에 유리한 규범이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주목한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구조의 근본적 변혁보다 일탈을 학습하게 하는 교류 관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③ X: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기존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지 않아 일탈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규범의 부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일탈 행동의 학습을 원인으로 본다.

④ X: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사회가 성공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일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화된 수단에 접근할 기회의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해결 방안은 일탈을 학습하는 교류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주장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의 관심은 왜 자본주의가 16⨉17세기 서구에서 발생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 당시의 물적 조건은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의 자본 획득 본능 역시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16⨉17세기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발흥에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정신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신은 이윤 추구를 직업적 성실성, 근면, 검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적 개혁 운동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태동시켰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단순한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닌 규범과 가치와 시장 제도가 결합된 사회적 수준의 사실이 된 것이다.

①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②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③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④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회 명목론**의 설명이다. 제시문은 규범·가치·시장 제도가 결합된 사회적 실체와 그것이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므로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제시문은 자본주의를 개인의 이윤 추구 행위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규범·가치·시장 제도가 결합된 사회적 수준의 사실로 본다. 또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개인의 경제 활동 방식을 바꾸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합을 넘어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며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사회 실재론의 관점이다.

① O: 사회 실재론은 사회를 **개인들의 단순한 합으로 환원할 수 없는 실체**로 본다. 제시문에서 자본주의를 개별적인 이윤 추구 행위 이상의 사회적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② O: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제도·규범·이념이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고 본다. 제시문에서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성실성·근면·검소를 강조하여 개인의 이윤 추구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설명한다.

③ X: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사회를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제시문의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며, 개인의 행동은 사회의 규범·가치·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④ O: 사회 실재론은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개인을 이해**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을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보며,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때 그가 속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중시한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우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강한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갑은 설문조사에서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 과거 6개월간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으로 각각 알아보기로 하였다. 갑은 ㉣ ○○대학교 학부생 중 성별, 학년, 전공을 고려해 ㉤ 100명의 학부생을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수행 후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 집단(집단 A)과 ㉦ 한 번 이상 참여한 학생 집단(집단 B)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① ㉠은 독립변수, ㉡은 종속변수이다.

② ㉡은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③ ㉣은 모집단, ㉤은 표본집단이다.

④ ㉥은 통제집단, ㉦은 실험집단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체화하는 것이 **조작적 정의**이다. 갑은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과거 6개월간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로 측정하도록 구체화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설정한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그 영향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는 결과 변수이다. 갑의 가설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대학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독립변수, ㉠이 종속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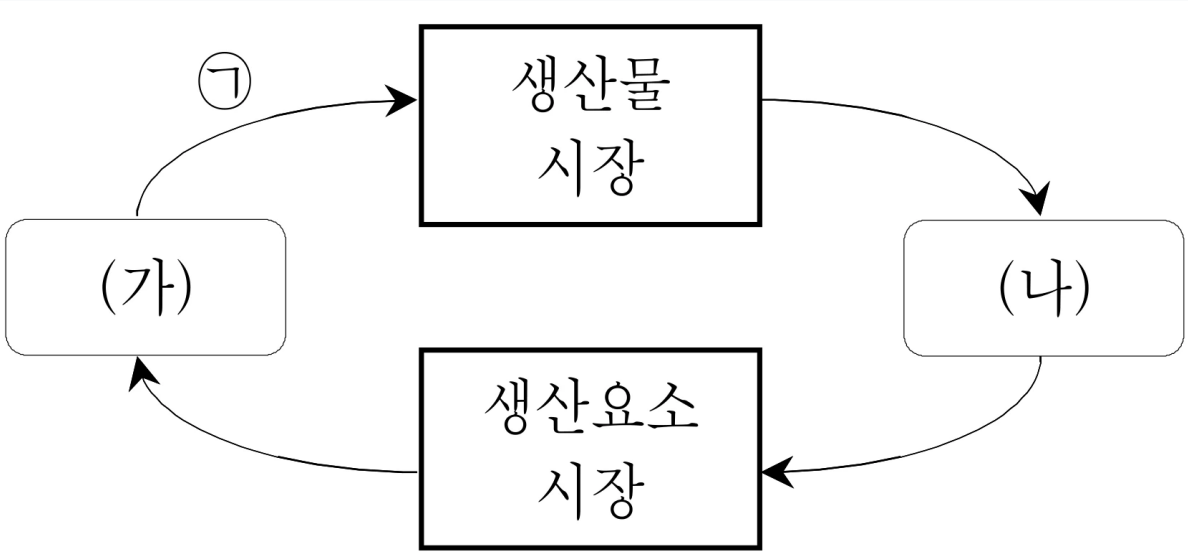
② O: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바꾸어 정의하는 것이다. 갑은 ㉡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 **'과거 6개월간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를 지표로 정하였다. 참여 횟수를 조사하여 사회적 관계의 정도를 수치로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③ X: 모집단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대상 전체이고, 표본집단은 실제 조사를 위해 추출한 대상이다. 갑의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이므로 이것이 모집단이다. ㉣ '○○대학교 학부생'은 표본을 뽑은 범위이며 모집단 전체가 아니다. 실제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 '100명의 학부생'은 표본집단이다.

④ X: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실험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한 집단과 그 처치를 가하지 않아 비교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갑은 동아리 참여 여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후 기존 참여 경험에 따라** 집단 A와 집단 B로 나누었다. 따라서 ㉥과 ㉦은 동아리 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일 뿐, 이 연구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볼 수 없다.

NoteBase

문 16.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①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나)의 경제 활동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이다.

②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에 해당한다.

③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④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면 (가)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향하는 돈은 **재화·서비스의 구입 대금**이다. 따라서 (가)는 생산물을 구매하는 가계이며,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계는 재화·서비스를 소비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서비스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토지·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거래되며, 화폐는 거래되는 실물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① X: (가)가 소비 활동의 주체인 가계라면 (나)는 기업이다. 기업의 경제 활동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이다. 효용의 극대화는 가계의 목적이다.

② X: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인 기업이라면 (가)는 가계이고, 그림의 화살표는 화폐의 흐름이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는 기업이 가계에 지급하므로 **(나) → 생산 요소 시장 → (가)**의 흐름에 해당한다. ㉠은 (가)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향하므로 가계가 지출하는 재화·서비스의 구입 대금이다.

③ X: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생산물 시장에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가)가 기업이고, 이를 공급받는 (나)는 가계이다. 따라서 (나)는 **소비 활동의 주체**이다. 아래쪽의 화살표는 가계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기업이 이를 공급받는 흐름을 나타낸다.

④ O: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에 구입 대금을 지출하고, (나)는 생산물 판매 대금을 받는다. 따라서 (가)는 가계이고 (나)는 기업이며, 가계인 (가)는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X재, Y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 Y재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의 값을 갖는다.

① X재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② X재의 수요가 증가해도 X재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③ Y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Y재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X재와 Y재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Y재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급 자체가 증가**하면 수직인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 거래량은 늘어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X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을 세로축, 수량을 가로축에 놓으면 공급 곡선이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은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일정한 경우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고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② X: X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수평인 공급 곡선과 만나는 균형점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 가격은 일정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균형 거래량에 변함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③ O: Y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므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이는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며, 다른 요인에 따른 **공급 자체의 증가까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수직인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에 따라 우하향하므로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④ X: 수요가 증가할 때 X재와 Y재의 균형 가격 변화는 다르다. X재는 공급 곡선이 수평이므로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Y재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므로 거래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수요 증가로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Y재뿐**이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변동은 ㉠ 총수요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 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① ㉠이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② ㉡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④ ㉠과 ㉡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총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다.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하므로, 총공급의 변동은 두 변수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선지별 해설

㉠은 총수요, ㉡은 총공급이다. 총수요는 각 물가 수준에서 경제 전체가 구입하려는 재화·서비스의 총량이고, 총공급은 생산하려는 총량이다. 아래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단기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X: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물가와 실질 GDP가 모두 하락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총공급이 감소**할 때 발생할 수 있다.

② O: 총공급이 증가하여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다. 반대로 총공급이 감소하여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따라서 총공급 변동에 따라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X: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하여 같은 물가 수준에서 생산하려는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생산비를 낮추므로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④ X: 총수요 증가와 총공급 증가는 모두 실질 GDP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실질 GDP는 증가**한다. 변동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은 물가이다. 총수요 증가는 물가 상승 요인이고 총공급 증가는 물가 하락 요인이므로, 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두 변화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NoteBase

문 19. 경기과열 시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①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②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상

③ 국·공채: 매각,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하

④ 국·공채: 매각,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경기과열로 늘어난 총수요를 줄이려면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국·공채 매각은 시중 자금을 회수하고, 재할인율과 지급준비율 인상은 은행의 대출 확대를 억제한다.

구성 요소별 해설

경기과열 시에는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를 억제하는 긴축 통화정책을 사용한다. 중앙은행이 시중 자금과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이면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다.

국·공채: 매각.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팔면 매입자가 지급한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므로 **시중 자금이 회수**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은 대금을 시중에 공급하므로 경기과열을 억제하려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

재할인율: 인상.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은행에서 다시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다. 이를 높이면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유인이 줄고, 대출 확대가 억제된다. 재할인율 인하는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는 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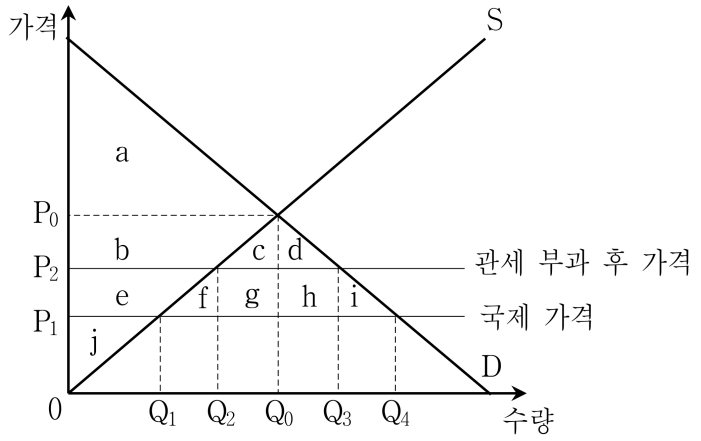
지급준비율: 인상.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액 중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이를 높이면 같은 예금액에서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감소**하여 은행의 신용 창조와 통화량 증가가 억제된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대출 여력을 늘리는 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세 정책을 모두 긴축 방향으로 묶으면 국·공채 매각,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이며, 이는 ④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a~j는 각 영역의 면적에 해당하며, 갑국은 X재만을 거래한다)

D와 S는 T기에 갑국의 X재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이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갑국은 T + 1기에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 무역을 통해 국제 가격 수준에서 X재를 수입하였으나, T + 2기에는 국내 X재 산업 보호를 위해 P_1P_2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보기>

ㄱ. T기에 비해 T+1기에 갑국의 사회적 잉여는 d+h+i만큼 증가한다.

ㄴ. T+2기에 갑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g+h이다.

ㄷ. T+1기에 비해 T+2기에 갑국에서는 f+i만큼의 사회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ㄹ. T+2기에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T+1기 보다 j+e만큼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가격이 올라 수입량이 줄어든다. 정부의 관세 수입은 **단위당 관세 × 관세 부과 후 수입량**에 해당하는 g+h이며,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로 생기는 **순수한 사회 후생 손실**은 f+i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T기에는 국내 가격이 P_0,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Q_0이다. 자유 무역을 하는 T+1기에는 가격이 P_1로 내려가 국내 생산량은 Q_1, 소비량은 Q_4가 된다. 관세를 부과한 T+2기에는 국내 가격이 P_2로 올라 국내 생산량은 Q_2, 소비량은 Q_3가 된다.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이면서 가격선 위의 면적이고, 생산자 잉여는 가격선 아래이면서 공급곡선 위의 면적이다. 사회적 잉여에는 두 잉여와 정부의 관세 수입을 합산한다.

ㄱ. X: T기에서 T+1기로 바뀌면 국내 생산량이 Q_0에서 Q_1로 줄어든다. 이 구간에서 국내 생산비가 국제 가격보다 높았으므로, 국내 생산을 수입으로 대체하여 얻는 이익은 공급곡선과 P_1 가격선 사이의 c+f+g이다. 소비량이 Q_0에서 Q_4로 늘면서 추가 소비에서 얻는 편익이 수입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d+h+i이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두 이익을 합친 **c+d+f+g+h+i**이다. d+h+i만으로는 생산 측면의 이익이 빠진다.

ㄴ. O: 단위당 관세는 $P_2 - P_1$이고,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을 뺀 $Q_3 - Q_2$이다. 관세 수입은 $(P_2 - P_1) \cdot (Q_3 - Q_2)$이므로, 그래프에서 두 가격선 사이이면서 Q_2부터 Q_3까지인 **직사각형 g+h**에 해당한다.

ㄷ. O: 관세로 국내 생산량이 Q_1에서 Q_2로 늘면, 국제 가격보다 높은 비용으로 국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데 따른 손실 f가 생긴다. 소비량이 Q_4에서 Q_3으로 줄면, 소비 편익이 국제 가격보다 큰 거래가 사라져 손실 i가 생긴다. 생산자 잉여 증가분과 정부의 관세 수입은 국내 경제 주체 사이에 이전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한 사회 후생 손실은 f+i**이다.

ㄹ. X: T+1기의 생산자 잉여는 P_1 가격선 아래이면서 공급곡선 위의 j이다. T+2기에는 가격이 P_2로 오르고 생산량이 Q_2로 늘어 생산자 잉여가 j+e가 된다. 따라서 j+e는 증가분이 아니라 관세 부과 후의 전체 생산자 잉여이며, **증가분은 e**이다.

옳은 보기는 ㄴ, ㄷ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